

지역 유일 향토유통업체 무너지나

빅마트 법정관리 신청…애타는 입점 상인들

지역경제 막대한 타격… 피해 최소화 절실

광주·전남 유일의 향토유통업체인 빅마트가 경영난을 겪자 못하고 끝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제계에서는 유통업계의 보루인 빅마트 마저 무너지면 영세상인들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조기 경영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광주지방법원과 빅마트에 따르면 빅마트는 영업작자 누적에 따른 경영난 기증으로 광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빅마트측은 “회사의 자산(400억 원)이 부채(270억원)보다 많아 기업 청산가치보다 지속가치가 크다”며 “회사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부채를 조기상환해 관련업계와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채무자인 빅마트에 대한 심문과 현장검증을 거친 뒤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통상 1~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며, 기각될 경우 해당 기업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빅마트는 지난 2007년 경영난으로 롯데쇼핑에 14개 매장을 넘기고 광주시 남구 주월점과 북구 매곡점, 화순점을 운영, 회생에 총력을 쏟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남은 3개점의 식품매장까지 롯데슈퍼에 입대한 이후 올 3월부터는 북구 매곡점을 패션 아울렛 빅시티로 전환, 의류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할인점 등의

공세로 매출이 급감한 데다 유동성 위기까지 겹쳐 법정관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마트측은 최근까지 300억원대 규모의 영업점 건물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한다는 복안을 갖고 은행권과 부채 상환시기를 조율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체권은행은 신한은행으로 120억원대 차권을 갖고 있다.

현재 빅시티 내에는 나이키, 톰스토리, 크로커다일 등 18개 의류 브랜드가 입점해 영업 중이며,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없이 10~15% 안팎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업하고 있다.

문제는 빅마트의 법정관리가 좌절되면 영세상인들의 납품대금, 직원들의 임금채권 등 모두 20억여원에 달하는 채권상환액이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주체권은행 등은 빅마트 측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고 있어 차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영세상인들은 차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패션아울렛 빅시티에서 여성 의류점은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최근 빅마트 층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기업을 믿고 지켜보고 있다”며 “법원이 영세상인들의 처지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빅마트는 지난 94년 법인 설립 이후 지역업체로는 유일하게 국내 대형마트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력을 과시했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0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한 빅마트의 광주시 남구 주월점 '빅시티'.

(광주일보 자료 사진)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 탄핵 무효”

법원 결정… 강경파 새 집행부 구성 강행 갈등 심화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원들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탄핵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강경파 노조원들은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노노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광주지법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0민사부(제2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9일 금호타이어 노조가 제기한 ‘탄핵(해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 강경파는 회사측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단체협약 후퇴·임금삭감 인정·다’며 “정치적 입장과 집권에만 눈이 멀어 노조를 갈라놓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탄핵 결의를 주도한 금호타이어 워크어웃 대응을 위한 협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일 오전 9시30분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노노간 마찰이 우려된다.

공대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노동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탄핵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임시 대의원대회는 사실상 개최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노조 운영규칙과 규약에 따라 개최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정처럼 발표, 허위공시(시설자금 대여)와 분식회계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계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금호타이어-비건 간의 이번거래 사건과 관련해 금호타이어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자사주 취득 제한 규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금호타이어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감독당국과 재판단에 의해 사전에 적발, 시정되지 못하고 뒤늦게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허위 공시’ 금호타이어 조사 착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대여금 제공 목적을 허위공시한 금호타이어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에 금호타이어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금전대여 목적 허위기재 등 이유로 금호타이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유가증권 시장본부의 상장공시위

원회는 조사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부과, 공시위반 제재금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당일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금호타이어는 2008년 2대주주였던 푸른파티아이-케이씨컴퍼니가 풋功课선(매도청구권) 주식 1억여달러를 매각 하려하자 케이먼군도의 페이퍼컴퍼니 비건과 이번계약을 맺고 자금을 빌려준 뒤 비건이 이 주식을 매입한

알려졌다.

기업호민관실은 민원을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비비복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국무총리실에 견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공서 보복 두려워 민원 포기했다”

중기청 규제 개혁 조사… 中企 30%가 답변

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행정기관에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이 중소기업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 개혁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로 ‘어차피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전체의 43.4%로 가장 많았다.

또 38.4%는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했고, 29.6%는 ‘꺼림칙해서’라고 답했다.

‘꺼림칙해서’라는 답변은 민원을 냈다가 오히려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기업은 159곳으로, 이들의 8.7%는 ‘비 보복 정책의 제도화’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한 정보통신기기 업체는 인허가 관청에 인증기간 단축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기간이 늘어났다고 호소하는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업호민관실을 찾은 것으로

코스피지수	1,651.70 (+4.48)
코스닥지수	491.63 (+4.63)
금리 (국고채 3년)	3.64% (+0.03)
원·달러 환율	1,251.00원 (+2.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남양 계열 남진건설도 법정관리

모기업 자금난… 경영 악화

법원이 남양건설의 계열사인 남진건설(주)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남진

건설은 모기업인 남양건설의 유동성 악화로 계열사들에게 644억원을 대여했는데 지난달 5일 14억여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며 “회사가 파산할 수 있고 회생

한 신고·조사를 거쳐 9월8일 첫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남진건설은 토목공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광주·전남 19위, 전국 179위 업체다. 지난해 매출 891억원, 당기순이익은 45억원이었으나 모기업인 남양건설의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에 직면하자 지난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벽화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벤처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험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 추천합니다.

관공서 보복 두려워 민원 포기했다”

중기청 규제 개혁 조사… 中企 30%가 답변

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행정기관에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이 중소기업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 개혁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로 ‘어차피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전체의 43.4%로 가장 많았다.

또 38.4%는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했고, 29.6%는 ‘꺼림칙해서’라고 답했다.

‘꺼림칙해서’라는 답변은 민원을 냈다가 오히려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기업은 159곳으로, 이들의 8.7%는 ‘비 보복 정책의 제도화’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한 정보통신기기 업체는 인허가 관청에 인증기간 단축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기간이 늘어났다고 호소하는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업호민관실을 찾은 것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

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

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

니다.

건물매매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업무 800만원

동산동 (22,000평) 전답 10만원

나주산포 (15,300평) 조례 35만원

동원동 4,469